

우크라이나
위기의 원인
4~5면

탈북민 월북은
지독한 차별의 결과
13면

반제국주의
관점에서 보는
사도광산 논란
6면

위구르족 해방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8~10면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연대가 관건이다
16면



2월 7일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피씨알 검사 무료화하고 치료·격리 지원 재개하라

각자도생 방역은 무책임한 도박이다

정부는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일반 서민들에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PCR 검사 유료화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사실상 감염을 방치하는 조처다.

이윤에 큰 영향을 줄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유주들을 위해서는 백신패스를 중단했다. 하지만 식당 등 일반인들이 자주 이용해야 하는 시설에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도서관과 학원 등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은 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정부는 항소를 유지하고 있고, 3월부터 적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았다.

백신 접종은 치명률을 낮추고 감염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은 존중돼야 하고,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위험도 실재하기 때문이다.

백신패스 의무화는 또한 감염 확산의 책임과 그 부담을 평범한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조처다. 정작 정부 자신은 노골적으로 확산을 방치하고 있다.

방역 효과도 극히 적고 고통을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백신패스 의무화는 중단돼야 한다.

정부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도 계속 외면하고 있다. '인과성'이 분명치 않다는 하나 마나 한 소리만 반복하며 피해자들을 천덕꾸러기 취급

한다. 백신 제조법 등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물론, 공개된 뒤에도 오랜 시험을 거쳐야 확인될 수 있는 것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인과성 여부를 입증할 능력도 없는 정부가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백신패스로 사실상 강제했으므로,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과성 판단에 앞서 조건 없이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29가구 157명이 울산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사진 출처: 현대중공업

울산 동구 주민 기고

우리 동네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환영한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이 한국에 왔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파병한 군부대, 한국 대사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기지 안에서 한국이 운영한 병원 등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이다.

이 중 157명이 울산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사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29명이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 12개 협력사에 취업한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보금자리와 일자리를 구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난민들의 경력을 보면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29명 중 의사가 4명, 약사 4명, 간호사 9명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의료 분야에 종사한 사람이 69퍼센트나 된다. 이 외에도 정보기술(IT) 2명, 통역 1명, 재무 1명, 운전 2명, 청소 2명, 경비 1명 등이며, 23명이 대학교 졸업자로 알려졌다. 이들이 정말 엔진기계사업부에서 일하는 것을 원했을까? 그리고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지난달 현대중공업 사장 이상균은 물량이 늘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라며, 난민 고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삶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선심 쓰는 척하면서 열악한 처지에 있는 난민을 고용한다는 말로 들렸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난민이 울산 동구

에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그들이 SNS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주장을 보면, 이슬람 혐오를 바탕으로 난민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며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모여 있지 못하게 분산 배치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이슬람 혐오에 반대해야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슬람을 획일체처럼 보는 것에서 비롯하는데, 편견일 뿐이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이슬람도 모순된 교리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예컨대 이슬람이 여성 차별적이라고 흔히 오해한다. 그러나 이슬람 교리에는 여성 차별적으로 해석될 구절들과 함께, 여성에게 관대하고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해석될 구절도 있다. 히잡과 부르카 착용도 여성의 굴종을 상징하는 게 아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의미 등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무슬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여기는 것도 근거가 없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무슬림 인구는 약 26만 명이다. 그 중 한국인도 6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한국에 테러가 일어났는가? 오히려 한국에서 테러 위험이 높아졌던 때는 한국 정부가 서방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협조했을 때였다.

이슬람 혐오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이 중동에서 석유 지배력

을 강화하려고 침략 전쟁을 하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 낸 인종차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ISIS나 탈레반이 성장한 것도 미국과 서방의 침략 전쟁이 낳은 참상에 원인이 있다.

침략 전쟁에 일조한 한국 정부의 책임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이들을 억지로 분산시키라는 요구도 너무 가혹하다. 정든 고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 떠나면 한국 땅에 왔는데 함께 온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야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엔진기계사업부에서 일하고 적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난민들이 자신의 경력을 살려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도탄에 빠뜨린 침략 전쟁에 일조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취업시켰다고 손놓을 것이 아니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이직을 원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있으면 적극 협력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



사진 출처: 광주 북구청

오미크론 변이는 팬데믹 종식을 예고하는가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를 두고 팬데믹 종식을 알리는 신호라고 한다. 예컨대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천 교수는 “오미크론이 참 반갑다. 전파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끝나간다는 걸 의미한다” 하며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물론 바이러스 중 일부가 그런 경로로 진화한 것은 사실이다. 병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는 숙주를 급방 죽게 만들어 사라지고, 독성이 약한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 오래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난 일을 사후적으로 평가할 때에나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일 뿐이다. 2년 전에 시작된 신종 바이러스 팬데믹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정책을 세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도 “이 바이러스는 위험하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각국이 코로나19에 대해 승리를 선언하거나 전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천연두는 수천 년 동안 인간과 공존하며 20세기 동안에만 5억 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그럼에도 결코 감기처럼 가벼운 병이 되지 않았다. 홍역, 소아마비, 티푸스, 결핵, 간염, 황열병 등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역사 이래 전혀 순화되지 않고 있다.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HIV 바이러스도 벌써 수십 년째 그 독성이 완화되지 않은 채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 바이러스성 질병의 전파가 줄어든 데에는 바이러스의 진화가 아니라 상하수도 등 위생 시설의 보급과 영양 섭취의 개선, 교육 기회의 확대 등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장호중

코로나 감염 폭증

오미크론보다 정부 대처가 더 문제다

장호중 의사,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속히 늘었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하루 확진자 수가 17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폭발적인 증가세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감염력이 한몫했다.

그러나 최근의 확진자 급증에는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은 감염 확산을 사실상 방치하는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첫째, 그동안 누구나 받을 수 있던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했다. 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거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에만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일반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면 보통 8만 원가량 든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간병인이나 입원 환자 보호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진단검사의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는 20퍼센트밖에 안 된다. 감염된 사람 다섯 명 중 한 명만 찾아낸다는 뜻이다. 의사들이 검사한 경우에도 감염자 두 명 중 한 명에게서만 양성 반응이 나왔다.

따라서 신속항원검사에 의존하는 것은 확진자 대부분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교적 오래 전에 개발된 검사 방법이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에서



실제 확진자 규모와 그로 인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이다

사용을 꺼려 온 이유다.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사용 허가 자체가 안 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확진자 수와 실제 감염자 수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날 것이다. 감염자를 찾아내 전파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사실상 그만둔 셈인데, 고작 20퍼센트를 찾아내려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꼴이니, 전형적인 보여 주기 식 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엄청난 노동 강도를 견뎌 온 보

건 ·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둘째, 감염자 찾아내기를 포기한 만큼 접촉자 추적과 확진자 격리, 재택치료도 의미가 없게 됐고, 고위험군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단됐다.

사실 밀접접촉자를 찾아내 조기에 검사를 받도록 하던 시스템은 마비된 지 오래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2년 가까이 유지해 온 게 신기할 따름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된 이

후로는 아예 보건소로부터 연락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정부의 방역 정책 변경은 일선에서 이미 그렇게 자리잡고 난 뒤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영성하기 짝이 없어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던 '재택치료'는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아예 '셀프치료'로 바뀌었다. 하루에 한 번 병원에서 오던 연락도 중단됐고,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최소한의 모니터링을 위한 물품 지급도 중단됐다. 생필품 지원도 지자체 판단에 내맡겨져 버렸다. 필요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는 용도로 사용되던 휴대전화용 앱도 운영이 중단됐다. 사실상 격리는 확진자와 그 가족에게 완전히 내맡겨져 버렸다.

일부 대기업들은 감염자 폭증으로 인한 조업 중단을 우려해 재택근무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무책임하게 방역을 포기할수록 대부분의 기업들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더 노골적으로 방기할 것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발표하며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심증팔구 일부 사례를 표적으로 삼아 처벌하거나, 언론을 활용해 비난함으로써, 정부 책임을 피하는 속죄양으로 만들려 할 것이다.

그러나 확진자 폭증은 사실상 정부 자신이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일도 모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전 세계 지배자들의 대세가 된 '집단면역' 정책

정부는 그동안 가장 주된 방역 대책이었던 검사 · 추적 · 격리를 모두 의미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방역 자원을 고령층과 중환자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둘러댄다.

그러나 최근의 조치들은 사후 대응이 라기보다는 사전에 계획된 정책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에서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보면서 방역 자원을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도 확대하지 않았다.

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이런 계획을 시행하기로 발표한 시점이 1월 21일이었으므로, 계획은 그보다 한참 전에 세

워진 것으로 보인다. 확산세가 한창이던 2월 4일에도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을 꺼낸 바 있다. 정부는 실패로 끝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오미크론 확산을 계기로 재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감처럼 관리”?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조치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델타 변이의 3분의 1 정도라지만 확진자 수는 세 곱절을 한참 넘겼다. 즉, 델타 변이 유행 당시보다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입원 환자도 크게 늘어날 텐데, 여러 차례 경험했듯이 이로 인해 병원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정부는 매번 유행 때마다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뒤늦었고, 불가피하지 않은 사망자가 생겨났다.

팬데믹 기간 내내 그랬듯이 다른 나라 정부들의 대처는 문제인 정부에게 좋은 핑곗거리가 돼 왔다. 덴마크와 영국 등 여러 유럽 정부들이 앞서 방역 조치를 모두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제 한국 등 여러 나라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모양새다. 세계적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경제 전망이 어두워

지자 앞다투어 자본주의 정부들은 위드 코로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기업 (이윤)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을 높인다. '스텔스 오미크론'(BA.2)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독일 등 일부 나라들에서는 오미크론 감염이 잦아든 뒤 델타 변이 감염 사례가 다시 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감염의 급격한 증가 탓에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진단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자들은 이윤을 위해 방역의 완급을 반복하며 인간의 생명을 건 도박을 벌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원인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2월 2일(현지 시각) 미국이 독일·폴란드·루마니아에 병력 3000명을 추가 파병하며 “나토 동맹을 안심시킬 준비가 돼 있으며 어떤 공격에도 방어에 나설 태세다. …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전 세계에 보내는 신호”라고 밝혔다. 한편, 2월 1일 기자회견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본격 고조된 후 처음으로 직접 “미국이 우리를 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규탄했다.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유리 프라사드**가 동유럽에서 고조되는 전쟁 위협의 배경을 밝히고, 갈등의 당사자들인 미국·유럽연합·러시아 제국주의의 이해관계를 살펴본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1년 소련 붕괴는 자본주의 옹호자들을 의기양양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1990년대는 “역사의 종말”에 이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경쟁 이데올로기인 “공산주의”가 종식됐으니 앞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적어도 1945년 이후의 냉전에 견줄 만한 규모와 지속성을 띤 일은 앞으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그전까지 양 진영으로 갈려 있던 유럽은 이제 서방의 확고한 우위하에 재통합되고, 절멸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주장했다.

처음부터 이것은 신화에 지나지 않았다.

동구권이 붕괴되자 그 여파로 옛 소련이나 동구권에 속했던 국가들 사이에서 잇달아 전쟁이 일어났다.

유고슬라비아가 붕괴하고 그 잔해 위에서 부상한 분리 독립 세력들 사이에서 1991년부터 1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다. 미국·유럽·러시아도 자신의 경쟁 우위를 위해 그 싸움에서 저마다 다른 “민족 집단”들을 지원했다.

1994년과 1999년에는 체첸 전쟁이 벌어졌다. 체첸이 러시아 연방에서 벗어나 서방의 보호를 받으려 하면서 벌어진 전쟁이었다.

2008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남(南)오세티야 지방의 통제권을 두고 러시아와 조지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오세티야는 두 국가 사이의 캅카스 산맥에 걸쳐 있는 곳이다.

같은 정치적 단층선이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 내전을 낳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했다.

대규모 병력이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집결해 있는 지금, 유럽은 새로운 전쟁 직전 상



동유럽은 새로운 냉전의 장이 될 수도 있다

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런 사례들에서, 나토(NATO) 군사 동맹을 동쪽으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집요한 노력은 자기 제국을 넓히려는 유럽연합(EU)의 소망과 언제나 맞물렸다. 이는 소련이 몰락하던 1991년에 미국이 당시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 한 약속을 대놓고 위반하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는 냉전 종식을 계기로 유럽 대륙의 판도를 적극 재편하고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동쪽으로 확장하려 했다. 미국이 자신이 주도하는 나토를 통해 군사적 확장을 이끌면, 유럽연합은 경제적으로 중부·동부 유럽으로 진출하려 했다.

미국이 보기에 러시아는 신자유주의로 통째로 집어삼킬 수 없는 강대국으로, 따라서 포위·약화·고립시켜야 하는 국가였다.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경제 강국 독일

나토를 동쪽으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집요한 노력은 자기 제국을 넓히려는 유럽연합의 소망과 언제나 맞물렸다.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푸틴은 이런 모든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 한다.

은 중부 유럽에서 이 상황을 한껏 이용했다. 독일은 자국을 위한 저임금 숙련 노동력, 제조업 중심지, 원자재 공급처, 시장을 확보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욕망은 끝이 없었고, 그래서 유럽연합은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 맞댄 나라들로까지 진출하려 했다.

나토의 동진

러시아에서 공급되는 값싼 에너지·원자재와 국내외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러시아의 군사 지원에 의존하던 나라들은, 유럽연합에게서 계속 유혹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투자, 현대화, 국제적 인정을 약속하고, 나토 회원국이 되면 군사적 보호도 보장해 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나토와 유럽연합은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한다는 야욕으로 굳게 단결한 듯 보이지만, 그 단결은 보기보다 훨씬 취약하다.

미국과 유럽 모두 전면전에 휘말리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서방이 러시아를 얼마나 압박해야 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전략적 필요가 서로 다른 것을 반영한다.

미국이 보기에, 유럽은 자신의 영향권 내에 있는 작지만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제국으로 대(對)러시아 경쟁의 하위 파트너다. 한편,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저마다 나름의 목표가 있는데, 이는 미국의 목표와 어긋날 수 있다.

몇몇 국가들, 예컨대 덴마크는 리투아니아 나토 공군기지에 전투기를 배치

하고 발트해에 구축함을 띄웠으며,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독일 지배계급은 지금으로서는 비교적 신중하다.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수출을 일절 거부했다. 〈뉴욕 타임스〉신문에 따르면 독일은 에스토니아에 있는 독일산 곡사포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게 해 달라는 요청도 물리치고 있다.

독일의 새 정부가 평화를 추구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독일 지배계급은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계속 흘러들어 오게 하느라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이유로 러시아에 가해질 경제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려 한다.(이에 관해서는 아래 ‘천연가스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갈등’ 참고.)

지난주 독일의 우파 정당 기독교민주연합(CDU, 이하 기민당)의 새 당대표는 우크라이나와의 대립을 이유로 러시아를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SWIFT, 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제외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독일의 경제적 이익을 “해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1월 초 독일 해군총감 카이아힘 쇤바흐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 반환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쇤바흐는 주제넘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사임해야 했지만, 그의 견해는 독일 지배층 사이에서 뚜렷한 공감대를

연고 있다.

독일이 미국의 경제적 도전자라면 러시아는 사뭇 다른 부류의 도전자다. 러시아는 냉전 종식 후 훨씬 쇠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핵무기로 무장하고 대군을 거느린 강대국이다.

또, 러시아는 막대한 석유·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푸틴은 이를 이용해 군대를 다시 무장시키고 훈련시켰다.

덕분에 러시아는 국경 너머 먼 곳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일례로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를 지원했다.

푸틴은 제국주의 체제 내의 적극적 행위자다.

푸틴은 러시아의 이익을 지키는 구실을 하는 억압적 정권들을 보호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을 약화시키기도 했다.

러시아는 이웃 나라들이 친서방으로 기울거나 푸틴을 우습게 보고 줄타기를 하는 듯하면, 그 나라 안의 반정부 세력들에게 돈과 무기를 지원해 줬다.

러시아는 친러 국가들의 독재자들을 강화시켜 주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벨라루스에서 2020년에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에 맞선 항쟁이 일어난 후 벌어진 일이다.

2009년까지 옛 동구권 국가 중 12곳이 나토에 가입했고, 그중 11개국은 유럽연합에도 가입했다. 2014년에는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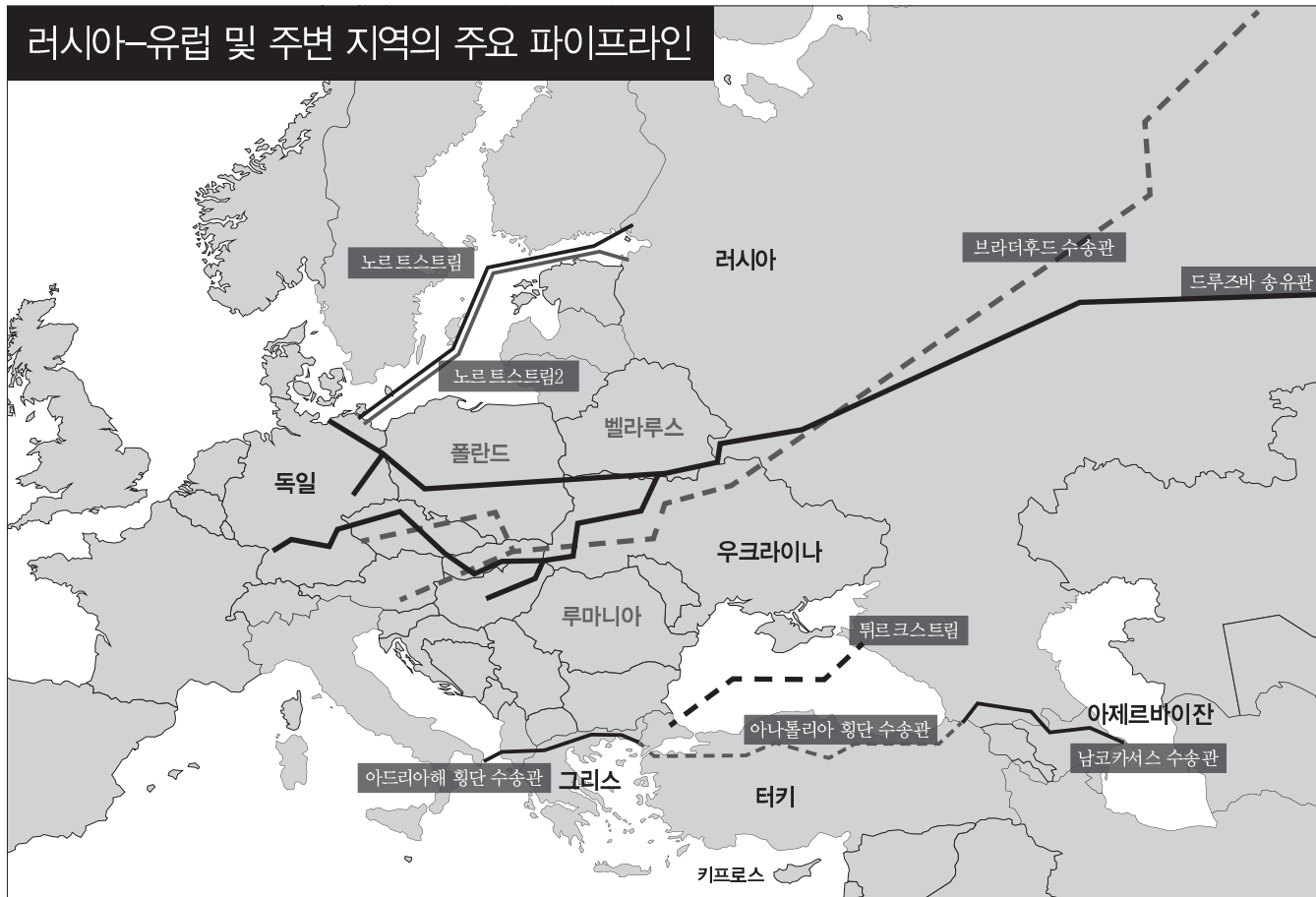
러시아의 힘과 제국주의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푸틴은 이런 모든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 한다. 필요하면 군사력도 동원하려 한다. 그래서 러시아군 약 10만 명과 탱크, 무기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 집결하고,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민병대에게 게릴라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그 동맹들이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태세를 갖추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시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극단적인 국수주의 수사들을 동원하고 있다.

영국·미국·유럽연합은 이런 의도적인 분열 조장을 부채질하고 있다. 상황이 결국 전쟁이나 내전으로 치닫한다면, 가장 커다란 희생을 치를 것은 분명 당사국 모두의 노동계급 대중과 가난한 사람들일 것이다.

러시아-유럽 및 주변 지역의 주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갈등

닉 클라크

미국과 러시아가 벌이는 갈등에는 천연가스와 가스관, 그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이 얹혀 있다.

지난주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사업을 좌절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막 완공된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2는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으로,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이 소유하고 있다. 독일에서 몇몇 법적 절차만 거치면 가동이 가능하다.

그런데 1월 26일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이 사업이 더 진전되지 않도록 독일과 협력할 것”이라고 어렵פות이 밝혔다.

앞으로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러시아를 제재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천연가스 공급을 끊어서 미국 편을 드는 유럽 국가들에 본패를 보이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노르트스트림 2, 더 일반적으로 천연가스는 러시아에 매우 중요하다. 이미 유럽 국가들은 천연가스 소비량의 35~40퍼센트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유럽의 주요 에너지 기업 다섯 곳이 노르트스트림 2에 투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럽에서 갖게 되는 영향력에 미국은 우려하는 것이다. 천연가스는 정치경제학자 사이먼 브룩

리가 말한 “전략적 재화”가 됐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국가들 간 경쟁 체제로, 이 경쟁 체제에서는 언제나 핵심 천연자원을 둘러싼 쟁투가 벌어져 왔다.

이런 쟁투는 단지 국민국가와 연계된 대기업들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핵심 자원들에 대한 통제권을 거머쥐면 국가를 강화시키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컨대 이라크의 석유를 장악하는 것은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유의 하나였다. 돈 때문에 이라크의 석유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중동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재확립하기를 바랐다.

석유를 통제하고 이에 대한 경쟁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바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오늘날 유럽 국가들은 갈수록 수입산 천연가스에 더 의존하게 됐다. 그러면서 천연가스는 국가 간 경쟁의 초점이 됐다.

예컨대 그리스와 터키는 키프로스 해역에 매장된 천연가스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싸고 여러 해 동안 서로 으르렁댔다. 그리스, 키프로스, 이스라엘, 이탈리아는 그곳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자기들끼리 갈라 먹는 협약을 맺었다. 여기서 터키는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그 천연가스로 벌어들일 돈 자체는 부차적이었다. 핵심은 터키가 지중해 동부에서 지배적 강국이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

미국은 1월 초 이 협약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자신의 동맹국들인 그리스와 터키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였다.

터키는 이미 천연가스 통제권을 두고 러시아와 갈등에 휘말린 바 있다. 2020년에 벌어진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이 그것이다. 유럽으로 가는 주요 송유관·가스관이 지나는 곳에서 벌어진 이 전쟁에서 터키와 러시아는 서로 다른 편을 들었다.

송유관·가스관 통제권은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중요한 수단이다. 미국은 이를 못마땅해 했다.

2021년 7월 유럽의회에 제출된 한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한다. “반대자들에게 노르트스트림 2는 러시아가 에너지·환경 문제에 관한 유럽 수준과 일국 수준의 결정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이 사업을 러시아가 ‘자신의 해로운 영향력을 유럽으로 더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묘사한다.”

노르트스트림 2는 전쟁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미국 대 러시아 갈등의 한 요인이다.

이는 서방의 목표가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보호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자본주의의 핵심인 파괴적 경쟁을 위한 것임을 보여 준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90호 번역 김준호

반제국주의 관점에서 보는 일본 사도광산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시도는 1999년부터 시작해 2014년 “메이지산업혁명 문화유산 만들기”로 명명된 역사 미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석탄·제철·조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 성공이라는 이야기로 엮여 있다. 사도광산도 그 일부인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개발이 시작됐고 한때 일본 최대 규모의 탄광이 존재했던 곳이다.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일찍 메이지 시대에 산업화를 이뤘다. 일본 지배자들은 그 덕분에 식민지로 전락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일본이 식민 지배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산업화 성공 과정과 전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었다.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리고 제1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일본은 선진 자본주의로 도약했다. 이 과정에서 대만·조선·중국에 대한 침략과 점령이 수반됐다.

일본 지배자들과 우익이 이 시기의 역사를 다시 쓰고 문화유산으로 등재해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에는 장기 침체를 극복하고 과거의 제국주의적 영광을 재현하자는 애국주의 호소가 담겨 있다.

‘메이지산업혁명 문화유산 만들기’를 적극 추진했던 전 총리 아베는 2015년 “번영이 평화의 기초”라며 “적극적 평화주의”를 말했다.

그러나 그 실 내용은 오늘날 일본도 군사대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규정된 ‘평화헌법’을 끈질기게 바꾸

려 하는 동시에 군비를 증강해 왔다. 이를 통해 반대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려는 것이다.

전쟁에 짓밟혔던 한·일 민중

일본 지배자들이 새로 쓰려는 역사에는 자본 축적과 기술 혁신의 신화만 있을 뿐, 피로 물든 착취와 억압의 역사는 완전히 삭제돼 있다.

한국 언론들이 많이 다뤘듯이 조선인, 중국인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배상이나 사과를커녕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은폐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 일본 지배자들이 은폐하려는 역사에는 초기 산업화 과정이나 전쟁기에 일본 노동자들이 겪었던 생지옥도 있다.

가령 미쓰비시가 운영했던 다카시마 탄광에서 1906년 사고가 발생해 307명이 목숨을 잃었다. 진폐증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런데도 미쓰비시는 1890년대 청일 전쟁과 국책 사업에 힘입어 사도광산을 인수하는 등 탄광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미쓰이가 운영했던 미이케 탄광은 가혹한 재소자 노동에 기초해 성장했고, 이후에는 일본인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가둬 놓고 일하게 해, 전쟁 시기에는 1년에 300만 톤이 넘는 석탄을 생산했다.

오늘날 일본 최대 재벌인 미쓰비시와 미쓰이는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일본 국가와 기업들은 1930년대 후반부터 전쟁 총동원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조선인 등 식민지 강제동원에 본격 착수했다.

여기에는 일본인 노동자들의 건강이 너무 악화돼 생산 실적이 부진했던 점과 함께 노동자들 사이에서 커져이 쌓인 불만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탄광 노동자들의 저항은 계속 벌어졌다. 1897년 다카시마와 하시마에서, 1918년에는 미이케 만다 강에서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파업 진압을 위해 군대까지 출동했을 정도다.

1924년에도 미이케에서는 제작소와 여러 강에서 잇따라 파업단이 조직돼 투쟁이 일어났다. 당시 그 지역 노동자 1만 9000명 중 6800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한다.

1945년 10월에는 패전 후 첫 노동자 소요가 조선인과 중국인 광부들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이 투쟁은 곧 일본인 광부들에게도 번졌다.(존 다우어, 《패배를 꺾안고》)

이처럼 일본 제국주의와 침략 전쟁은 결코 일본인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전선의 전방과 후방에서 마른 갈래 쥐어짜듯 착취당했던 대다수 일본 노동자들의 처지는 조선인 노동자들과 더 가까웠다.

제국주의 vs 노동계급 국제주의

지금 일본 정부가 벌이는 “역사 전쟁”은 대외 팽창 정책에 방해가 되는 악명 높은 과거를 지우려는 시도이자, 고도 성장의 영광스런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 온 국민이 뭉쳐야 한다는 대국민 메시지이기도 하다. 일본 우익들은 여기에 반한·반중 감정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이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국가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본인에게 이익이 아니다.

한편,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더는 억압하는 나라와 억압받는 나라의 관계가 아니다. 두 국가는 지난 60년간 미국 제국주의에 협력하는 것을 핵심 고리로 긴밀하게 엮여 왔다. 특히, 그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는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다. 성장(자본 축적)의 결과로 한일 관계의 양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또한 여전한 격차가 있다.

그래서 한국 지배자들은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듯하다가도 결국 양보하곤 했다.

그래서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의 배신과 외면에 끊임없이 고통받았다.

빼적거리기도 하지만 완전히 해체된 것도 아닌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에 대해 한국 지배자들이 가진 이해관계 때문에 민족주의적 항의는 본질적인 관계를 갖는다.

제국주의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계급적이고 국제주의적인 관점에서야 한다.

김승주

추천 책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명, 김하영 지음, 책갈피, 400쪽,
16,000원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제명 시도 중단하라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무소속)을 제명하려 한다. 민주당 대표 송영길은 (3선 초과 의원 동일 지역구 출마 제한과 함께) 윤미향 제명안을 '개혁'안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윤 의원 제명 추진은 진정한 개혁과는 아무 관계 없다.

국민의힘이 윤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를 민주당 식 '내로남불'의 표본으로 공격하자, 윤 의원을 잘라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지지율을 올리려는 기회주의적 책략일 뿐이다.

2020년 9월 윤 의원 징계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막상 민주당이 윤 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선거용 제명 카드"라고 비난했다. 투표일까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공격할 소재로 이용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민주당의 윤 의원 제명 추진은 심각한 정치적 문제점들이 있다.

현재 윤 의원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직 사법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당은 '혐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민주'당이 태연하게 민주적 권리를 부정하는 일들을 하니(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 왜곡처벌법도 그런 사례다), 우파가 민주당의 위선을 파고들어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정대협 1세대 활동가 18명이 "윤 의원에 잘못이 있다면 그 크기만큼 책임지면 될 일입니다. 의원직 제명도 그때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 합당한 주장이다.

윤 의원에 대한 의혹도 언론에 의해 부풀려지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액수가 크지 않다.

우파측 언론들이 윤 의원이 사적으로 후원금을 유용했다고 공격한 쟁점들 중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이 많다. 딸 유학 자금, 부동산 구매, 선관위 신고 재산에 기부금 포함 같은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이 기소한 것은 윤미향 피고인 개인이 2011년부터 8년간 8000만 원을 착복했다는 것이다. 1년에 890만 원 꼴이다. 검찰은 회계 증빙이 부족한 것을 다 윤미향 개인 소비로 판단했다. 윤 의원 측은 직원 회식비로 지출했다고



사진 출처: 윤미향 의원실

민주당의 기회주의적 정치적 비판과 사법적 단죄는 구분돼야 한다

해명하고 있다. 양측이 현재 재판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쟁점이다.

물론 윤미향 의원은 과거에 정대협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예산 집행과 회계 처리에 철저해야 했었다. 그러나 미비한 회계 처리를 곧장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을 사적으로 착복한 부패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 점에서, 국회 윤리위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두 의원(이상직과 박덕흠)과 윤미향 의원은 구별돼야 한다.

이상직은 이스타항공 회삿돈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게다가 직원 600명을 해고하면서 임금·퇴직금 600억 원도 주지 않았다.

박덕흠은 건설 비리 종합 세트라 불릴 만한 전형적인 특권층 부패 의혹을 산 자다. 가족 회사를 통해 피감 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일감을 받은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덕흠 측은 이 사실을 최초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며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보도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을 때 정의당은 국회 윤리위를 소집해 윤 의원 징계 절차를 논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이다.

조국 사태에서 조국을 변호하다 크게 데이다 보니 정치적 균형 감각을 잃은 듯하다. 그러나 윤미향 의원 제명 문제에 대해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선거적 이해득실에 따라 민주적 기본권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간단히 무시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동조해서도 안 된다.

정치 문제

혁명가들이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반대한다는 것이 곧 윤 의원의 정치에 대해 무비판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특히 세 가지 점을 지적했다.

첫째, 위안부 운동이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재정을 의존하면서, 피억압 대중 운동의 정치적 원칙과 자주성을 잃어 갔다.

둘째,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운동을 민주당의 의원이 되는 사다리로서 이용하려다 운동 내부(그것도 핵심적인 내부)의 비판에 직면했다. 따라서 윤미향 사건은 국가의 운동 탄압 때문이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이 집권한) 국가를 이용하려던 전략의 난점이 드러난 것이다.

셋째,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위안부 운동의 리더들이, 반제국주의 세력이 기는커녕 친제국주의 세력의 일부인 민

주당과 한국 정부를 우리 편으로 여기는 잘못된 진영을 구축했다.

이렇듯, 윤미향 의원에 대한 우리의 비판은 전적으로 정치적 측면(개혁주의적 전망과 방법)에 맞춰졌다. 회계 문제에서의 불투명함은 이런 정치적 약점의 무의식적 부산물이다.

그러나 윤미향 의원의 정치가 개혁주의적이라는 것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돼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김인식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미안마 쿠데타: 항쟁 1년
- ★ 스포츠와 자본주의
- ★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서평
- ★ 《미싱타는 여자》 영화평
- ★ [시청자 전화 발언]
불세비키를 모델로 했던
중국공산당이 어떻게
한족 민족주의 정당이 됐는가
- ★ 중대재해, 특정 기업의
탐욕만 문제일까?

위구르족 해방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김영익

이 글은 1월 27일 같은 주제로 열린 노동자 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을 개정한 것이다. 그날 토론회에서 필자는 '위구르인들의 분리 독립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분리 독립을 포함한 민족 자결권을 지지한다"고 하는 게 옳을 것이다. 민족 자결권은 '분리 독립'이라는 특수한 요구로 축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 점을 반영해 개정됐다.

2월 4일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시작됐다. 개막식에서 중국 당국은 성화 최종 주자로 한 위구르인 선수를 내세웠다. 이는 올림픽 보이콧 논란을 의식한 일이었다.

앞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은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했다. 미국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도 만들었다.

미국 등이 보이콧에 나서자, 문재인

정부는 베이징에 가는 사절단의 격을 낮췄다. 국민의힘 윤석열은 위구르 문제에서 미국 편을 더 확실히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정치인들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들의 인권을 탄압한다고 비난하는 반면,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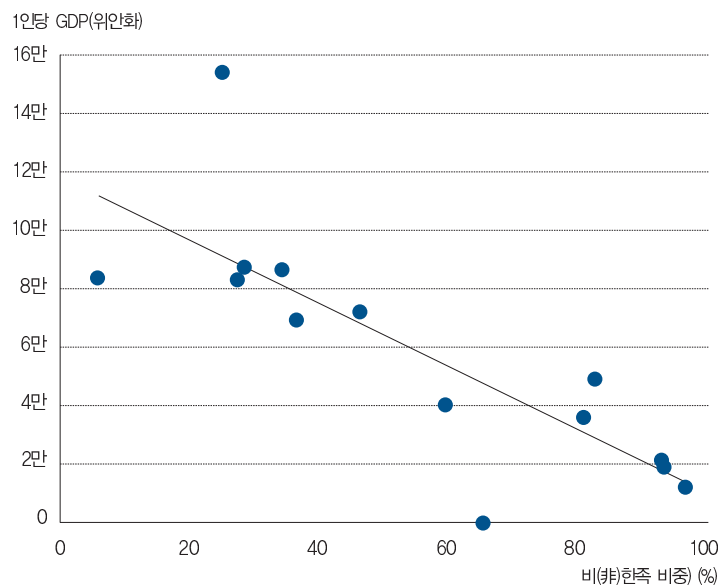
위구르 문제는 국제 좌파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다. 예컨대, 영국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는 미국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국을 제재하자고 한다. 반면 진영 논리를 따라 중국 정부를 옹호하는 좌파도 있다. 국내 좌파들도 이와 비슷하다.

미·중 갈등의 쟁점이 된 위구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 글에서는 크게 4가지를 얘기하려 한다. 첫째, 위구르 문제에 관한 서구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위선. 둘째, 중국의 신장 지배 과정과 위구르인들의 처지. 셋째, 냉전 해체 이후 최근까지 위구르 억압이 악화된 까닭. 마지막으로 위구르족 해방을 왜 지지해야 하는가.

신장 경제 개발에서 소외되고 차별당하는 위구르인들

— 신장의 지역별 비(非)한족 비중과 1인당 소득



서구의 이해관계와 위선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위구르 억압을 두고 "인권 탄압", "집단 학살"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다.

미국은 자기 동맹국의 인권 문제는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 예컨대, 미국의 동맹국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을 가혹하게 억압하는 인종 분리 국가이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을 두둔해 왔다. 지난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폭격할 때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에 7억 달러(8387억 원) 넘는 무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인권 탄압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벌인 인도주의적 개입은 온갖 인권 탄압과 학살을 낳았다. 예컨대 2001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며 '여성을 위한 전쟁'이라고 했지만, 정작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의 약 70퍼센트가 여성과 어린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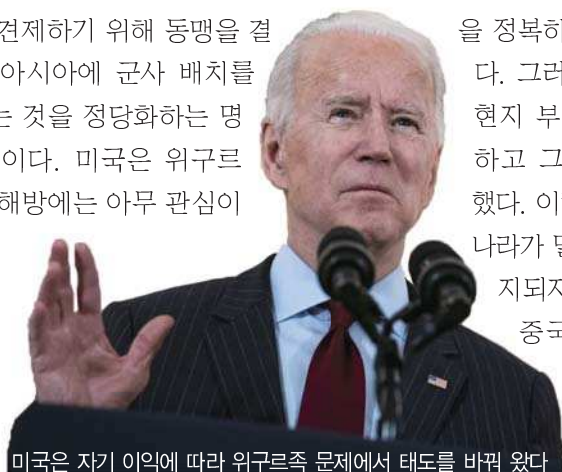
위구르족 문제에서도 미국은 자기 이익에 따라 태도를 뒤바꿨다. 2001년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은 중국의 지지를 대가로 중국의 위구르족 억압을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 정부의 의견을 수용해 실체가 있는지조차 미심쩍은 한 위구르 단체를 테러 단

체로 지목했고, 2002년에는 위구르인 22명을 관타나모 수용소로 잡아갔다.

최근 미국이 위구르 억압을 문제 삼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 됐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미국이 주도해 온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본다.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이라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장하고 있다. 위구르 문제는 홍콩 민주주의 탄압 등과 더불어 미국이 '권위주의' 중국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대변한다고 선전할 수 있는 소재다.

이처럼 미국에게 위구르 문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을 결집하고 아시아에 군사 배치를 증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일 뿐이다. 미국은 위구르인들의 해방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미국은 자기 이익에 따라 위구르족 문제에서 태도를 바꿔 왔다

중국의 신장 지배

사실 인권 탄압이라는 것은 모호한 규정이다. 위구르 문제는 단지 개별 시민들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가 민족 자결권을 억압하는 문제다. 위구르인들에 대한 탄압은 민족 억압의 결과이고 제국주의의 문제인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신장 지역이 고대부터 중국에서 분리될 수 없는 일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다. 한나라·당나라가 잠시 관여한 적이 있으나, 오랫동안 신장은 한족의 땅인 중국과는 별개의 지역이었다.

18세기 중엽에야 청나라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신장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청나라 관리들은 현지 부족 통치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의존해야만 했다. 이런 지배도 1911년 청나라가 멸망하면서 제대로 유지되지 못했다.

중국공산당이 신장 지역을 장악한 것은 1949년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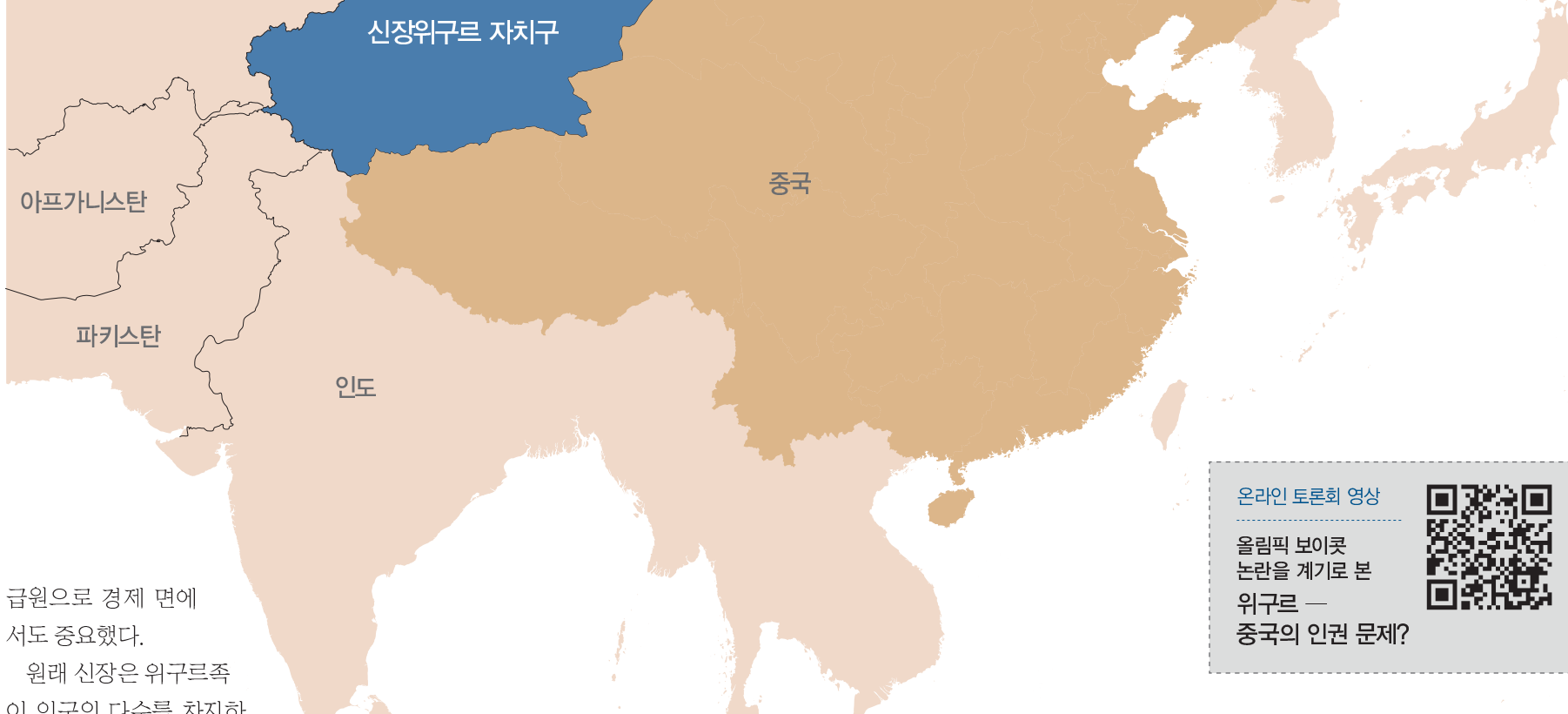
리하면서다.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1921년 창당한 중국공산당은 원래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옹호했다. 하지만 1930년대에 한족 민족주의 정당으로 변모했다. 1949년 중국공산당은 권력을 잡으면서 애초에 소수민족들에게 공언했던 민족 자결권 약속을 저버렸다.

1949년 혁명으로 탄생한 신중국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사회의 새로운 지배자인 중국공산당 관료들은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해 소수민족 지역의 인력과 천연자원을 강탈했다. 이는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 확장과 영토 병합 논리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것이었다.

중국공산당에게 신장은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중요한 지역이었다. 먼저, 안보 면에서 신장은 내륙을 보호할 수 있는 거대한 완충 지대로 여겨졌다. 1960년대 중국과 소련 간에는 적대와 국경 분쟁이 지속됐는데, 중국공산당은 소련이 서부 국경에서 침공할 경우 신장이 완충지 구실을 하기를 바랐다. 또 신장은 석유, 비철금속 등의 자원 공

안보와 경제 모두 중국에 중요한 신장 지역

중국은 신장을 내륙을 보호하는 거대한 완충지대이자 석유·비철금속 등 자원 공급원 구실로 보며 위구르인들의 자결권을 억압해 왔다.



급원으로 경제 면에
서도 중요했다.

원래 신장은 위구르족
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

고, 그 밖에 카자흐인 등 다른 투르크
계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다. 중국공산
당은 이곳을 명목상 자치구로 지정했
다. 그러나 자치는 허울이었다. 행정과
군사의 실권은 대부분 현지 한족 관리
들 손에 있었다. 그래서 1949년 이후
10년이 채 안 돼 자치구 내 한족 관리
들의 “거만함”과 “횡포”에 대한 불만이
고개를 들었다.

중국 지배 관료들은 이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족을 신장으로
대거 이주시켰다. 그 중심에 신장생산
건설병단(이하 “병단”)이 있었다. 병단
은 한족의 신장 정착을 다루는 기관이
었고, 신장의 경제·군사 부문에서 핵
심 구실을 했다.

1949년 신장 인구 중 한족은 7퍼센
트이고 위구르족은 76퍼센트였다. 그
런데 이주 정책으로 한족이 많이 유입
되면서 1978년에는 한족이 42퍼센트
로, 46퍼센트인 위구르족과 거의 맞먹
게 됐다. 한족 이주로 인해 위구르인들
의 사회·경제적 입지도 점차 줄어들
었다.

1966년 문화혁명 같은 중앙 정부의
노선 변화도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구습 타파라는 미명 아
래 무슬림의 성지 순례가 금지됐고, 이
슬람 사원이 폐쇄되거나 파괴됐다. 심
지어 이슬람 사원을 무슬림들이 금기
시하는 돼지의 사육장으로 쓰는 경우
도 있었다. 또, 많은 비(非)한족 간부들
이 “소련 앞잡이”나 “수정주의자”로 몰
려 숙청되면서, 비한족 관리의 규모가
대폭 줄었다.

냉전 해체 이후 신장

마오쩌둥 사후 1980년대에 이르러,
신장 지역에 대한 억압은 다소 완화됐
다. 이슬람 사원들이 다시 문을 열었
고, 성지 순례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1980년대의 상대적 유화기는 오래 가
지 못했다.

1990년대부터 중국 정부가 여러 개
발 프로그램으로 신장 경제를 개발했
는데 위구르인들은 그 결실을 누리지
 못했다. 예컨대, 신장 경제의 한 축인
면화 생산의 많은 부분을 한족이 담당
했다. 위구르인들은 고용과 복지 등에
서도 차별받았다. 한 통계 자료를 보
면, 비한족 인구가 95퍼센트를 차지하
는 신장 남부의 경우 1인당 평균 소득
이 신장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비한
족 인구가 많을수록 평균 소득이 떨어
지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강압적 통제도
다시 강화됐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
이 있다. 우선, 1991년 소련 해체가 중
국공산당 지도부에게 위기감을 줬다.
신장과 인접한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독립이 위구르인들을 자극할까 봐 걱
정한 것이다.

실제로 많은 위구르인들이 이런 물
음을 품었다. ‘카자흐인들의 나라인 카
자흐스탄도 되고, 우즈베크인들의 나라
인 우즈베키스탄도 되는데, 왜 위구르
스탄은 안 되지?’ 중국 당국은 위구르
인들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우려해 단
속을 강화했고, 이슬람 종교의 관습도

억제했다.

또한 학교에서 중국어 사용을 강요
했다. 예컨대 중국 정부는 2003년부터
신장 대학에서 위구르 문학을 제외한
모든 수업이 표준 중국어(보통화)로 진
행돼야 한다고 명령했다. 당시 신장 당
서기는 “소수민족들의 언어는 수용 능
력이 작고 근대 과학과 기술에 관한 표
현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는 모욕
적인 말로 이 정책을 정당화했다.

2001년 9·11 사건도 또 다른 배경
이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
자, 중국은 재빠르게 신장 정책의 초점
을 반테러 노선으로 옮겼다. 그리고 자
신들도 신장에서 테러리즘에 맞서 싸
운다고 선언했다. 별 근거도 없이 신장
현지의 저항이 모두 알카에다와 탈레
반과 연계된 테러로 규정됐다. 그러나
그 ‘테러’는 대부분 자생적이고 사전 계
획 없이 시작된 저항이었다.

신장에서 검문소가 급격하게 늘었
고, 검문소에서 가방과 휴대전화를 검
문검색당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가택
수색도 정기적으로, 특히 밤에 벌어졌
다. 그 과정에서 많은 위구르인들이 부
당하게 체포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
었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
타인인들을 상대로 벌이는 범죄 행위
와 다를 바 없다. 신장이 “중국판 [팔레
스타인] 서안지구”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2013년 시진핑이 권력을 잡은 이래

신장 지역에 대한 통제와 억압은 더 강
화돼 왔다. 특히, 미·중 갈등이 점증하
면서 중국 지배자들은 미국이 위구르
인 등 소수민족들을 지원해 중국의 분
열을 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신
장은 일대일로의 핵심 거점이 되는 등
중국 지배자들에게 그 중요성이 더 커
졌다.

강압적 통제에 위구르인들의 반발이
거듭되자, 2014년 시진핑 정부는 ‘반
테러 인민전쟁’을 선포했다. 시진핑은
2001년 9·11 사건 이후 미국의 반테
러 활동에서 배우라고 당 기구에 지시
하기도 했다.

시진핑 정부는 노골적인 동화 정책
(이른바 제2세대 민족정책)을 펴고 있
다. 이를 위해 한족 출신 관리들이 위
구르인 가구들을 밀착 감시하게 했는
데, 이 과정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
다는 증언들이 있다. 신장 곳곳에 이른
바 ‘재교육 캠프’나 ‘교육훈련 학교’ 같
은 시설들도 세워졌다. 몇 년 전에는 위
구르인 경제학자 일함 토흐티가 정부
전복을 선동했다며 종신형을 선고받았
다. 그는 위구르 독립이 아니라 자치라
는 온건한 대안을 주장했는데도 그랬
다. 지금도 많은 위구르인들이 실종되
거나 잡혀가고 있다.

소수민족 자치를 제한하고 동화를
촉진하는 시진핑 정부의 정책은 이제
신장을 넘어 다른 곳에도 적용되고 있
다. 그래서 2020년 네이멍구(내몽골)
에서는 몽골어 교육 축소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분출하기도 했다.

▶ 10면으로 이어짐

온라인 토론회 영상

올림픽 보이콧
논란을 계기로 본
위구르 —
중국의 인권 문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제정 논의 시작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심의를 개시했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이 법안은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가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도 비슷한 내용의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말년에 추진하던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꼭 닮았다. 당시 반대가 크자 박근혜의 마지막 총리 황교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에 법안 이름을 사이버보안법으로 바꿔 통과시키려 했었다.

이 법안은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 대응에서 민·관·군에 대한 사실상의 총괄

지휘부(컨트롤 타워) 구실을 하면서 사이버안보계획을 제출해 정부 각 기관들을 조정하며, 각종 정보 수집과 사찰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은 개인 정보 보안(암호와 해킹 방지 등)도 포함하는 문제인데, 그런 사이버 보안을 모두 국가 안보(테러 대응) 문제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정보 보호를 빌미로 국가가 개인 정보를 임의로 들여다볼 권한을 갖겠다는 것이다.

이런 악법이 늘 그렇듯이, 법안이 막겠다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규정은 정작 모호하다. 그런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사이버 테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하니 국정원의 광범한 사찰이 가능하고 정당화되는 것이다. 다른 정부 부처와 민간 통신기업들에게 광범한 통신

기록을 받아 내고 심지어 보안 장비들도 들여다볼 수 있다.

이 법이 활용할 ‘보안관제 시스템’은 “IP 주소 같은 사용자들의 접속 정보나 패킷, 다운로드한 파일 등을 수집하거나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특정인의 인터넷 사용 전반에 대한 사찰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감히 이런 법안을 촛불 운동 때에 내놓았으니 통과시킬 수는 없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첫해 국정원이 다시 비슷한 법안을 냈으나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김병기 안은 “사이버 테러”를 “사이버안보 위협 행위”로 단어만 바꿨을 뿐, 이 법안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다만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아예 국정원장 소속으로 두고, 민간 기업들까지도 국정원 관할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다르다.

그러므로 김병기 안은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이 법안은 국가의 억압적 기관들이 비밀리에 벌이는 광범한 사찰과 감시를 합법화하는 것이고,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다. 법안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커 조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청

와대가 소집했었다고 한다. 이는 청와대가 이 법안을 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이다. 결국 이 조율이 실패해 경찰청장 김창룡은 공개적으로 국정원 권한 강화에 반대했다.

그러나 총괄 지휘부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느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느냐가 악법의 성격을 바꾸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어떻게 해도 실질적으로 국정원이 중심 구실을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고친 국가정보원법에서도 사이버 테러 대응 전반에 대한 계획과 조정은 국정원의 임무다.

민간 IT 기업 일부도 반대하지만, IT 빅테크에 대해 국가가 통제를 늘리는 것은 최근 추세다. 일본도 사이버 보안 인프라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보법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 침체와 국제 질서 불안정 속에서 국가 간 안보 경쟁, 국가 간·기업 간 기술 경쟁(기술 보안)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이런 요인들에 기인한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저항이 빠르게 번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 법안의 배경이다. 국가가 민간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김문성



▶ 9면에서 이어짐

위구르족의 자결권을 지지해야 한다

중국의 가혹한 민족 억압 속에서도 위구르인들의 해방 염원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1949년 이래 위구르인들의 저항이 여러 차례 대규모로 일어나곤 했다.

2009년에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저항이 있었다. 중국 광둥성에서 위구르인 노동자 2명이 성폭행범으로 억울하게 몰려 살해되자, 신장 우루무치에서 위구르인 수천 명이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경찰이 발포하며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이에 위구르인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 발표로는 197명이 죽었다. 중국 정부는 사망자 대다수가 위구르인에게 공격당한 한족이라고 했지만, 현장 목격자들은 이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사회·경제적 불만이 개선되기는커녕 중국 군경의 폭력으로 거듭 좌절되면

서 위구르인들의 해방 염원은 더 강해졌다. 시진핑 정부가 표면적으로 위구르족의 저항을 잘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의 일은 장담할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분리 독립을 포함한 위구르족의 민족 자결권을 일관되게 옹호해야 한다. 강제적인 소수민족 통합은 사회주의와 아무 관계도 없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 특히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레닌은 제국주의에 억압당하는 민족의 자결권을 지지해야 한다고 매우 강조했다.

이는 무엇보다 노동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위해서다. 민족 억압은 지배하는 민족의 노동자와 지배당하는 민족의 노동자 사이를 분열시킨다. 레닌은 이를 극복하려면 억압 민족의 노동자들이 억압당하는 민족의 자결권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다. 즉, 진정한 단결을

위해 분리의 자유가 필요하다.

또한 민족 해방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 레닌은 식민지 대중의 저항이 제국주의 지배자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고, 이는 본국 노동계급의 저항에 힘이 된다고 봤다.

민족 자결권에 관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접근법은 위구르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최근 중국의 한족 노동자들은 여러 투쟁에서 거대한 잠재력을 힐끗 보여줬다. 이 한족 노동자들이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지지해야 한다. 그래야 민족 간 적대를 넘어 소수민족들과 단결할 수 있고, 그런 단결된 힘으로 중국 지배자들에 맞서 자력 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미국 제국주의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위구르인들의 해방을 이룰 수 없다. 그

것을 비극적으로 보여 준 사례가 바로 쿠르드족이다. 쿠르드족은 독립을 위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도왔지만, 미국은 2017년 이라크 내 쿠르드족의 독립 시도를 저지했다.

그러나 좌파 중 일부가 위구르족 저항을 지지하는 것은 미국을 돕는 꼴이라며 위구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잘못이다. 중국을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진보적’ 대안으로 여기며 중국 제국주의의 악행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에 반대하는 것처럼 중국의 위구르 억압도 반대해야 한다.

요컨대, 미국과 중국 제국주의 둘 다에 반대해야 한다. 한국에 사는 우리는 위구르인들을 걱정하는 척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선을 폭로해야 하고, 그들의 올림픽 보이콧과 경제 제재 등을 지지해선 안 된다. 그러면서도 중국 제국주의에 맞선 위구르인들의 해방을 지지해야 한다.

물가 계속 오르는데도 전기·가스 요금까지 올린다는 정부

강동훈

올해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퍼센트나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3.2퍼센트 상승으로 9년 8개월 만에 3퍼센트대로 올라선 뒤, 지난달까지 3달째 3퍼센트대 상승이다.

특히 1월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5.5퍼센트나 올라, 2009년 2월(5.6퍼센트)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갈비탕, 김밥, 햄버거, 라면, 치킨 등이 6~10퍼센트 올라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게다가 '밥상 물가'로 불리는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가 2021년에 5.9퍼센트나 올라 서민의 삶은 정말 팍팍해졌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에다가 이처럼 물가·전월세 상승 등으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는 공공서비스 요금까지 올리려고 한다.

대선이 끝난 4월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각각 10.6퍼센트, 16.2퍼센트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국제 석유 가격 급등 때문에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석유 가격뿐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들도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이 최근의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배럴당 20달러 수준까지 떨어진 유가는 최근 90달러를 넘어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국제 유가는 조만간 10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국·서유럽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갈등은 석유와 LNG 가격이 치솟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석유 가격 인상으로 국제적으로 곡물·사료 가격도 올라 식료품 가격도 치솟고 있다.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민심이 나빠지자 유류세를 인하하기도 했지만 유류세 인하 효과는 100여 일 만에 사라졌다.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휘발유 가격은 조만간 유류세 감면 전과 같은 리터당 18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석유 가격 상승으로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등 정유사들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7조 원을 넘으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전기·가스·수도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을 연료비에 연동해 변경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들과 석유·우유·밀가루 같은 생필품들은 정부가 지원해 노동자·서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 지원

한편, 좌파 일각에서도 기후를 위해서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여긴다. 최근 기후위기 경기·서울·인천·충남 비상행동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기 요금 인상은 노동자·서민의 전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담을 키울 뿐이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 부담은 커진다. 탈탄소 전환을 위한 부담은 노동자·서민이 아니라 탄소 배출로 큰 이익을 거둬 온 기업들이 책임져야 한다.

공공서비스 요금을 포함한 물가 인상에 맞서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돼야 한다. 지난해 노조가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협약임금인상률)은 3.9퍼센트 인상돼 물가상승률을 겨우

따라잡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4퍼센트가량)을 고려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1.5퍼센트에 그쳐 특히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임금보다 임금에 붙는 세금이 더 올랐다.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한국의 노동자 임금은 17.6퍼센트(310만 6000원에서 365만

4000원으로) 오른 데 비해,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처럼 임금에 붙는 세금은 39.4퍼센트(36만 4000원에서 50만 7000원으로)나 올랐다.

'착한 적자'를 감수하며 더 많은 투자와 보조금 지급으로 공공서비스와 생필품 가격을 낮추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또, 임금을 물가 이상으로 올리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우리의 삶이 후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전기 요금 인상이 탈원전 때문이라고?

국민의힘 윤석열은 전기 요금 인상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4월로 예정된 전기 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부터 핵발전은 증가해 왔다. 전체 발전량 중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3퍼센트에서, 2019년 25퍼센트, 2020년에는 28퍼센트까지 늘어났다. 고리1호

기, 월성1호기는 폐쇄됐지만, 그보다 용량이 큰 신고리3·4호기가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 중 하나가 바로 탈원전 포기이다.

그동안 시장을 찬양하고 온갖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윤석열이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진지하게 반대할 리 만무하다. 윤석열은 전기 요금 인상을 득표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우파 포퓰리즘적 '립 서비스'나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외국인 건강보험 공격, 내국인에게도 해롭다

임준형

1월 30일 윤석열이 SNS에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부도덕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인종차별과 민족적 적대를 부추기는 글을 올렸다.

윤석열은 2021년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이 7~8명씩 등록했다고 비난했다. 또, 한 중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으나 10퍼센트만 본인이 부담한 사례를 부각했다. 그러면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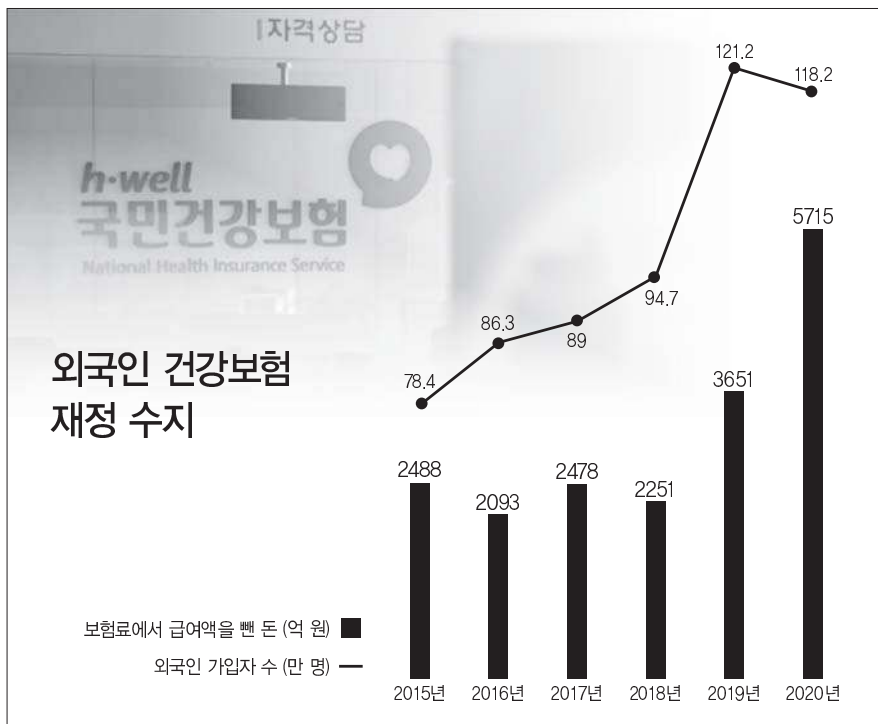
그러나 이주민은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를 안기고 있다. 2016~2020년 연평균 3112억 원이 넘는다. 2020년에는 5715억 원에 이르렀다.

반면 정부는 가장 큰 체납자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해마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돈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2007~2020년 누적된 미지급금이 무려 28조 원이다. 2020년에만 3조 2700억 원을 미납했다(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또 2019년 1월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 수는 내국인의 절반도 안 된다.(외국인 0.39명, 내국인 1.05명)

어떤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했다면 이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일 수 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내국인과 달리 소득에 상관없이 전년도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야 한다. 월 11만 원이 넘는다. 게다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으로 인정된다. 고령의 부모, 성인이지만 대학에 다니거나 장애가 있는 등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가족 구성원이 모두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니 어떻게든 직장가입자의 피



이주민은 건보 재정에 흑자를 안기고 있다. 특히 2019년 제도 개악 후 그 규모도 급격히 커졌다

부양자로 올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

33억 원의 급여를 받은 사례를 비난한 것도 비열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자료에 혈우병을 앓는 중국인이 그 액수의 급여를 받은 사례가 나온다. 아마 윤석열이 말한 것이 이 사례일 텐데, 그는 희귀한 난치병 환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3억 원이 넘는 본인 부담금도 보통의 경제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복지 여왕’

2013~2017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 양상을 보면,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1인당 연간 진료비와 입·내원 일수가 적었다. 그런데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내국인보다 높았다.('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및 이용특성 분석', 2019)

즉, 이주민은 평소 의료 이용이 적으며 중증이 돼서야 치료를 받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언어 장벽, 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긴 노동시간 등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

이다. 이주노동자는 내국인보다 산재 발생률도 높다.

윤석열이 이주민의 건강보험 수급을 문제 삼아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전반적인 복지 축소일 것이다.

예컨대, 신자유주의에 앞장선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1976년 대선 유세에서 '죽은 남편 4명의 명의로 연금을 수령하는 흑인 여성 복지 여왕이 있다'고 선동했다. 저소득층 복지를 인종차별과 결합해 세금 낭비로 몰아붙인 것이다.

나중에 이 여성은 실존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후 이런 복지 부정수급론(세금 낭비)은 복지 축소를 정당화하는 단골 메뉴로 이용됐다. 오늘날 미국의 복지, 특히 의료 복지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그 폐해는 코로나19 위기로 재조명됐다.

이처럼 돈을 낸 만큼만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나 인종차별론이 강화되는 것은 내국인에게도 해롭다.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이주민이든 내국인이든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개악했다

윤석열이 SNS에 이주민의 건강보험 수급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이재명과 정의당이 이를 정면 비판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를 안기고 있어 오히려 내국인이 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인종차별적 행태를 비판한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악한 것은 비판하지 않았다. 이는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 해이 방지', '내·외국인 간 형평성',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운운하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했다. 보험료를 여러 번 체납하면 체류 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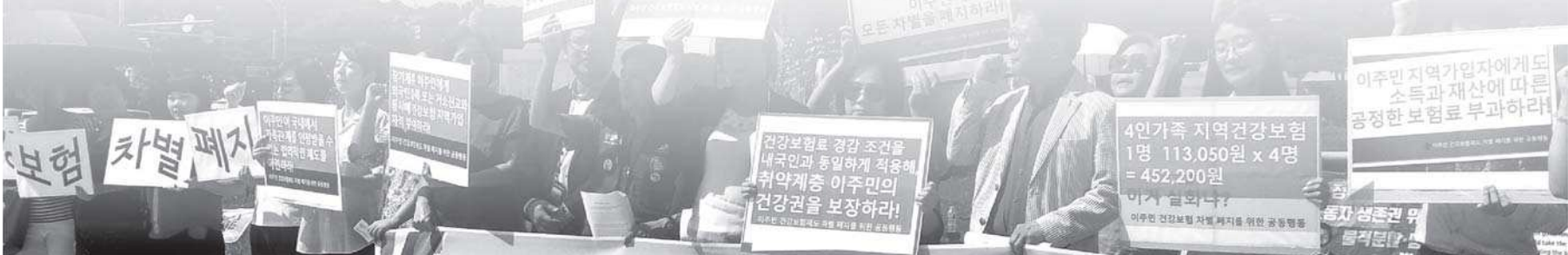
당시 개악의 핵심 취지가 최근 윤석열의 비난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30~40만 원이 넘는 보험료가 부과된 이주민이 적지 않다. 2020년 외국인 가입자는 전년도보다 약 3만 명 감소했는데도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는 2064억 원 늘었다.

윤석열의 외국인 건강보험 수급 비난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대중의 환멸을 이용하려는 측면도 있다. 문재인은 62퍼센트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중에 70퍼센트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이른바 '문재인 케어'), 지난해까지 고작 1.6퍼센트포인트 올렸다. 반면 보험료는 연평균 2.7퍼센트씩 인상됐다.

윤석열은 이주민을 속죄양 삼으며 이런 불만을 파고드는 것이다.

이재명의 윤석열 비판이 '내로남불'이 되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도 비판해야 한다.



탈북민 월북 — 지독한 차별의 결과

임준형

새해 첫날, 한 30대 탈북민이 휴전선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2020년 11월 같은 경로로 탈북했고 북한에서 기계제조 선수였다고 밝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런데 불과 1년여 만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이미 지난해 6월 자신을 북한으로 보내 달라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려고 한 적 있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감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는 청소 용역 노동자로 일하며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과 교류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한편, 최근 월북을 시도하다 실패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이던 40대 탈북민이 재차 월북을 시

도하다 또 실패한 사건도 있었다.

그는 지난해 6월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월북하려다 실패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그가 “대한민국 정부나 단체가 항상 자신을 사찰한다고 생각했고 무직인 데다 대출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는 경제 상태로 월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수기 판매 회사에 다니다가 지난해 3월 그만둔 상태였다.

법원은 집행유예 조건으로 그에게 보호 관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외출 금지, 정신질환 치료 등을 명령했다. 항상 사찰당한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비정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를 견디기 힘들었는지 그는 또 다시 월북을 시도하다 실패했고, 2월 2일 집행유예가 취소돼 구속됐다.

연평균 3명 재입북, 탈남은 훨씬 많아

탈북민의 월북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2012~2020년 월북 사실이 확인된 탈북민만 30명이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 세계 각지로 ‘탈남’한 탈북민으로 넓히면 그 수가 약 5000명에 이른다고 추정된다. 지난해까지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이 약 3만 4000명이니, 6~7명 중 1명인 셈이다. 2019년 한 해에만 탈북

민 771명이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북한인권 정보센터가 탈북민 40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18.5퍼센트가 재입북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나 중국, 영국 등지로 이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자도 26.3퍼센트나 됐다.

빈곤에 쓰러지고 편견에 고립되는

남한에서 겪는 체계적 차별이 탈북민의 재입북과 탈남의 원인이다.

2020년 기준 탈북민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약 46시간, 월 평균 임금은 216만 원이었다. 한국 전체 평균보다 8시간 많이 일하지만 임금은 52만 원 적은 것이다. 탈북민의 고용률은 54.4퍼센트로 한국 전체보다 6퍼센트 낮았고, 실업률은 9.4퍼센트로 3배나 높았다.

2018년 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3.8퍼센트로 한국 전체 3.4퍼센트보다 훨씬 높았다.

탈북민을 잠재적 간첩이나 열등한 존재로 보는 편견도 적지 않다. 이는 남한 내 친인척과 인맥이 없거나

부족한 탈북민들에게 사회적 고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탈북민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이런 편견을 부추긴다. 탈북민이 남한에 오면 국가정보원 소속 기관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반드시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기관의 원래 이름은 중앙합동신문센터였다. 이곳을 나온 후에도 5년간 경찰을 ‘보호담당관’으로 붙여 감시한다. 탈북민을 간첩이나 위험 인물로 전제하는 것이다.

탈북민이 철책을 넘어 월북할 때마다 우파나 언론들이 “허술한 군 경계망”을 질타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는 탈북민의 처지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지배자들은 왕래, 주민들은 금지 파주시 통일대교를 가로막은 바리케이드

지원 강화와 자유 왕래 보장해야

탈북의 성격도 변해 왔다. 냉전 시기 탈북민은 극소수였고 남북 체제 경쟁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정치적 난민의 성격이 강했다. 반면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이 극심해지자 굶주림을 피해 탈북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2010년대부터는 더 살기 좋은 사회에서 살려는 이민형 탈북민이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남한에서 기대한 삶을 누리지 못하면 제3국이든 북한이든 탈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다른 이주노동자들이 그러듯이 말이

다.

안타깝게도 재입북한 경우는 물론, 제3국으로 탈남한 탈북민들도 빈곤과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 불황의 장기화 속에서 각국 정부가 이주민 배척과 속죄양 삼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또한 남북 주민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

고 한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렴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 2021년 2월 27일 개정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workerssolidarity.org/join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 📌 노동자 연대
- 🌐 wspaper_org
- 🐦 @wspaper
- 📺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wspaper.org/online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팬데믹, 기후 위기, 차별과 해방, 좌파의 대안 논의 등 주제별 영상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맑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시사/이슈 토크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공수처 통신조치 논란,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오미크론 확산과 백신 불평등, N번방 방지법 ...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하는 [주말 pick] /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계급 불평등 강화하는 대학 구조조정

최근 교육부는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 최대 60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정부의 충원율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대학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같은 날 교육부는 '2023년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지정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의 입맛대로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끊는 것이다. '살생부'에 오른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

대학들은 정부의 정원 감축 압박에 반발해 왔다. 정부가 정원 감축의 대가로 재정을 지원한다지만 지원 기간이 한정돼 있고 그 액수도 충분치 않아 결국 대학 운영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입학 정원을 감축한 대학들이 이런 경험을 한 바 있다.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없고 재정이 충분한 대학들은 정부의 정원 감축 유도 정책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입생 미충원으로 재정난을 겪는 사립 대학들은 정부 지원이 끊기면 재정난이 더 심각해지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정원을 감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근거로 대학 정원을 감축하고 서열이 낮은 대학들을 퇴출하려 한다. 그런데 학령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국의 대학이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한국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0~60퍼센트다.

역대 한국 정부는 모두 대학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에 매우 인색했다. 정부가 고등 교육에 지출하는 재정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다. 한국의 사립대 비율은 85퍼센트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만큼 대학 교육의 비용을 학생들에게 떠넘겼다는 얘기다.

대학 당국은 학생과 노동자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부족한 정부 지원을 메꿔 왔다. 한국의 사립대 등록금 액수는 OECD 7위다. 많은 학생들이 높은 등록금을 마련하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졸업하면 학자금 대출 빚을 갚느라 허덕인다. 대학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강요받는다.



교육 기회 박탈 퇴출 대상이 되는 대학들은 대부분 노동계급 등 서민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지방 사립대들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줄이려 한다.

고통 전가

대학 구조조정은 애꿎은 학생과 대학 노동자들의 고통을 키운다.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부실대 출신' 낙인은 학생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고,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 선정될 때마다 해당 대학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다.

정부의 재정 지원 중단은 대학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노동조건 악화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초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된 예원예대의 교직원들은 8개월치 임금이 체불됐다.

대학 퇴출은 해당 대학의 학생들에게 치명적이다. 인근 대학에 같은 전공이나 비슷한 계열의 학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학제가 달라 편입학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결국 편입학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다. 2020년 폐교된 동부산대 학생들 일부는 인근 대학에 동일한 학과가 없어 편입학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조기 졸업을 했다.

가까스로 편입학에 성공해도 '폐교대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모멸

감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2018년 서남대가 폐교돼 인근의 전북대 등으로 편입한 학생들은 '학벌 세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편입 대상 대학의 학생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을 염려하며 이해할 만한 불평을 터뜨리기도 한다(편입생들을 비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지만 말이다).

퇴출 대상이 되는 대학들은 대학 서열의 하위에 있는 대학들로, 대부분 노동계급 등 서민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지방 사립대들이다. 따라서 대학 구조조정은 교육 기회에 대한 계급 불평등을 더 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폐교는 교직원들을 졸지에 실업자로 만들어 그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다. 폐쇄된 동부산대, 한중대, 서남대의 교직원들은 새 일자리를 찾아 전전해야 했다.

따라서 부실한 대학을 폐교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공립화해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값싼 노동력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배계급은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이 늘어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정부와 친기업주 언론들은 모든 사람들이 대학에 갈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노동계급 자녀의 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을 줄이려는 것이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불황기에 저임금 일자리에 필요한 노동 공급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요구도 반영한다. 열악한 일자리를 노동계급 청년들에게 강요하는 계획의 일부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은 탓에 많은 청년이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려 왔다.

애초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것은 기업들과 국가의 필요 때문이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지면서 대학이 팽창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불황이 길어지자 고학력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둔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과 정부는 OECD 국가 중 최고인 대학 진학률을 낭비로 여기며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권리다. 가난하고 팍팍한 삶을 살기도 서러운데, 왜 대학에서 교육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해야 하는가.

진짜 문제는 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는커녕 줄이려 하고, 청년들에게 저질 일자리를 감내하라고 강요하는 정부와 기업들이다.

기업의 필요를 우선하며 대학의 학생과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해야 한다.

이재혁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연대가 관건이다: 이것이 정치다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2월 8일 현재 43일 차를 지나고 있다.

파업 노동자(전국택배노조) 1650여명은 한 달 넘게 수입을 포기하면서도 거의 이탈 없이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는 각오다.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택배기사의 분류 작업 제외, 요금 인상분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 등)과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킬 부속합의서(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 폐지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투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CJ대한통운 사측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초기부터 파업 노조원 비중이 높은 지역들(경기도 성남·광주, 울산, 경남 창원 등)에서는 택배 접수를 중단시켰다. 이 지역들에서는 수 주에서 한 달가량 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데 말이다.

설 특수기에는 직영기사(합법 대체 배송) 등 추가 인력 1700명을 투입하기도 했다.

사회적 합의의 주체 중 하나인 문재인 정부도 사측 편을 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여주기식 현장 조사를 하고는,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며 면죄부를 줬다. 국토교통부가 방문한 터미널 25곳 중 72퍼센트(18곳)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여전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 이후, 택배·화물 기업주들을 대변하는 통합물류협회가 적반하장으로 택배 파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처럼 사측과 정부가 자신들이 약속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서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점유율 약 50퍼센트로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은 격화하는 경쟁에서 추격자들을 뿌리치려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 특히 잠재적 경쟁자인 쿠팡이 머지않아 택배 사업에 뛰어들 것을 염두에 두고, 내년까지 2조 5000억 원을 투자해 배송 인프라 구축에 나서려 한다.

사회적 합의로 인한 요금 상당 부분을 사측이 자기 주머니로 가져가려는 까닭이자 노동자들에게 당일 배송 등의



과로사 방지 말고 합의 이행하라 1월 20일 군포복합물류센터 총력투쟁 결의대회

속도 경쟁을 강요하는 이유다.

사측은 파업 노동자 수가 전체 택배기사의 7~8퍼센트 정도인 것을 이용해, 택배노조와 조합원들의 기세를 이참에 꺾어 놓겠다는 태세다. 수익성 증대와 빠른 배송 경쟁 강요에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하에서 성장 중인 택배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한다. 최근 사기가 높았던 택배 노동자들을 좌절시켜, 다른 노동자들의 투지도 약화시키려고 한다. 노동자 투쟁 단속능력을 보여 줘 사용자들의 신임을 얻으려는 것이다.

친사용자 언론들은 비노조원들이 택배 파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파업

의 정당성을 깎고 노노 갈등을 부추긴다. 특히나 일부 대리점 소장들이 비조합원 택배 기사들과 파업 중단 요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도 벌이자, 이런 비난이 더욱 기세를 부리고 있다.

요컨대, 정부와 사용자들은 매우 정치적으로 파업을 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연대 확대에 더욱 나서야

지난해 택배노조 마녀사냥이 민주노총 탄압으로 이어졌듯이 택배노조에 대한 공격은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민주노총의 책임이 크다. 산하 조직 동원을 통한 연대 확

대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사용자들의 파업 탄압과 비난 공세에 맞서, 파업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고 분열시키려는 작태에 맞서, 택배 파업에 대한 연대를 확대·강화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2월 11일에야 연대 집회를 잡은 것은 많이 늦었다.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파업 조합원 전체 2박 3일 집중 상경투쟁(2월 10일~12일)을 계획하고 있다.

상경 투쟁이 연대 집회의 동원과 결합된다면, CJ대한통운 파업 조합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후속 연대 투쟁 계획이 시급하다. 전국택배노조는 상경 투쟁 직후인 13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타 택배사 조합원들에게 파업 조합원 생계비 마련을 위한 채권 구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사실 파업을 응원하는 비조합원들은 적지 않다. 울산 등지에선 비조합원들이 파업 집회에 동참하고 있다. “택배노조 설립 후 현장 조건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노동자·청년·학생 등에서 택배 파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적지 않다.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 투쟁이 오히려 부족했다.

2월 8일 노동계 4개 진보정당(정의당, 진보당, 노동당(변혁당과 합당), 녹색당)이 공동으로 택배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했다.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노동자 연대〉지지자들은 택배 파업 연대 확대를 위해 노력하자.

신정환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정체성 정치와 해방 전략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2월 17일(목) 오후 8시 발제 **양효영** <노동자 연대> 기자,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공저자

여성, 성소수자 등 차별 반대 운동 내에서 정체성 정치는 상식처럼 여겨집니다. 몇 년 전에는 ‘불편한 용기’ 시위 같은 정체성 기반 운동이 대규모로 벌어지기도 했죠. 그러나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체성 정치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적잖습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예민 난민 배척 주장이나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 등이 정체성 정치의 문제점을 톡톡 드러냈기 때문이죠. 특정 정체성이 운동의 핵심 분단선이 돼야 할까요? 정체성 정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일까요? 차별에 맞서는 효과적인 전략에 대해 토론해 보려 합니다.

참가신청 bit.ly/0217meeting

-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온라인토론회’